

産業環境管理에 있어서의

統制, 協議, 또는 獎勵制度

산업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어느 한가지 시책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또 의존해서는 안된다. 즉 통제, 협의 및 장려제도등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책은 국가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또는 통제경제국이든 시장경제국이든, 어느 두 나라의 오염규제 및 환경관리는 다소 다른 방법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소련에서는 산업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기준을 정해 놓고 만약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중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제도를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Kenneth Boulding, A.Kneese 등 경제학자들의 제의에 의하여 발전시켰으며 서유럽에서 널리 유행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하는 배출부과금 제도를 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야자유공장 및 고무공장 폐수의 규제에 배출부과금 제도를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장려제도는 공장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이익이 있게 마련인데, 즉 산업체에서는 어떤 End-of-pipe treatment 기술을 모색하게 되고, 그러한 기술이 존재하고 경제적이기만 한다면 폐기물이 적게 나오거나 폐기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산업환경의 최선의 관리방법에 관한 주제의 논문은 대단히 많다. 장려제도는 정부로부터 기업체에 직접인가(認可) 자금융자, 또는 엄격

한 규칙을 잘 준수하는 기업체에 세금감면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무연(無鉛)가솔린 차량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5년이라는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세입의 결손은 무연 가솔린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충당시킨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새로운 차량의 판매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미국환경청에서 제의한 “기포”란 개념은 산업체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오염방지를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는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추후로 미루어 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다.

기준설정을 통한 통제이든, 기업에의 장려제도이든, 정부와 기업간, 또는 한 기업체와 인근에서 서로의 영향을 가장 받기 쉬운 타기업체간의 협의든 이중 어떤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반드시 계획 및 진전단계뿐만 아니라 운영단계에서도 실행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협의에서는 전전한 환경관리의 원칙이 제도에 설정되어야 한다.

환경관리란 산업발전의 중요 과정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대개 어떠한 차원에서건 협의를 하는 것이 법정 쟁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과거 수년동안에 환경정책이 오염자 부담원칙에서 오염방지 부담쪽으로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했을 때는 오염자에게 얼마만큼 부담을 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환경이 한번 오염되고 나면, 특히 오염원이 다수일 때, 오염자가 각기 얼마씩 부담해야 할 것인가 산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특정지역에서 질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인근 산업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알 수 없는 환경요인 때문인가? 오염방지 정책은 석면으로 야기되었던 바와 같은 역학(疫學)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된다.

그러나 역학이 통계학적으로 해석하는 과학이기 때문에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답을 할 수가 있다.

1984년 6월에 있었던 OECD(경제협력 및 개발기구)의 “환경과 경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즉 비록 “반응과 치유”라는 시책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의 손상은 계속해서 감시해야 하므로 실행할 수만 있다면 “예상과 예방”이라는 시책으로 기울어지려는 경향이 있다.

북반구에서 처음 대두된 산성비문제는 서둘러 대응한 “반응 및 치유”정책의 하나이다. 산성비의 영향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국정부에서는 발전소나 자동차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SO₂, NO_x, 옥시탄트 및 기타 가스의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는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1984년 6월 뮌헨에서 개최된 최근의 환경회의에서는 OECD 회원국들 뿐만 아니라 동구권국가들도 향후 10년간 대기중에 배출되는 SO₂의 양을 30% 감소시키는데에 합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산성비의 원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기대해 왔다.

한편 미국에서는 산성비로 인하여 자유의 여신상이 손상을 입게 된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데, 19세기 프랑스에서 제작된 그 유명한 햇불은 새것으로 대체 되었다.

예방정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SO₂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유동상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기전까지는 적어도 총발전 비용의 20%의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 특히 북미 및 동구에서는 일반 대중들이 환경을 나쁘게 하는 것이 명백한 오염행위를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 전기나 무연석유(無鉛石油)를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한다.

경우나 지역조건에 따라서 접근방법이나 해결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개념에 맞서서 규칙과 기준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실로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 및 환경보호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무절제한 살충제 사용이나, 발전소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또는 자동차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에는 그 경계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였다. 조화는 높은 기준이 골고루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된다. 국제무역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세계에서는 조화된 기준의 유지는 공정한 거래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특히 금리가 인상될 때 국제 차관의 상환 및 환불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이들 국가는 자국 수출품의 구매력이 특히 농산품인 경우, 수입되는 공산품이나 기름과 같은 기초상품의 비용보다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에게는 우선권의 목록에서 환경관리를 낮은 순위에 두도록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1982년 5월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UNEP이 사회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보전이 직업을 창출하며, 경제적인 곤란을 야기하지 않고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개발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현재 산업공해를 규제하기 위한 압

법 및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남반구 및 북반구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지역적 인식이 실질적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지역수준에서 주도된 환경문제에 관한 많은 장관급 회의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몇몇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나라의 환경이 오염물질을 흡수해도 아직은 별 다른 피해가 없을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처럼 엄격한 오염방지 시책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우리가 보아 왔듯이 산업에서의 자원관리는 보다 큰 생산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보다 훌륭한 환경관리와 직결된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와 산업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산업의 통제는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말레이시아 산업이 야자유 및 고무공장 폐수의 배출규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법정 징의나 관세에 따르기 보다는 협의와 숙고를 실천하고 있다.

UNEP에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침과 원칙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EP에서는 현재 잠정적인 오염행위를 시작전이나 계속중에 효과적으로 알아내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법률적, 행정적 조치뿐만 아

니라 오염으로 인한 희생자 대책을 포함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국제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요는 이와같은 국제 환경법의 원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 및 일반대중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국토를 다음세대에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들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은 그들 자신이 잠정적인 환경오염원이며 또 자신들의 막강한 능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대중은 자신들이 소비자이고 소비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이며, 더구나 소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지불할 것인가는 기업의 활동 및 정부의 거동에 관련되고 있다.

금년 11월 베르사이유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산업환경관리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정부와 산업이 취해야 할 최선의 방도에 대하여 토론의 광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 내가가꾼 환경속에

자손만대 웃고산다.*